

일하는 엄마와 저출산

박수미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5월 9일 한국사회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라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저출산 위기정국’은 또 한 번 술렁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폭발을 우려하며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생생히 기억되는 우리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진 급격한 출산율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 추세는 우리 사회에 일종의 위기의식을 조장하며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저출산’ 현상은 위기인가?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편으론 그렇다고 또 다른 한편으론 아니라고 말하고자 한다. 먼저 저출산 현상이 위기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소자녀 가치관으로 표현되는 저출산 현상이 매우 자연스러운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의미와 가치, 경제구조와 개인의 생애 전략 등은 과거 전통사회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적게 낳고 오래 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사회는 왜 그렇게 저출산 현상을 문제 삼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거시지표를 운운하며 사회부양비가 증대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된다거나 혹은 사

회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어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매우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리가 ‘저출산’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지표가 개인의 진정한 욕구와 실제 생애전략간의 분명한 간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수준을 더 이상 저출산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비해 수많은 조사결과를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 성원들은 바람직한 자녀수, 혹은 낳고 싶은 기대 자녀수로 2명을 꼽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수는 1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선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1명도 채 되지 않는 자녀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신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는 데에 결혼이나 출산이 의미 있는 경로가 되기보다는 결혼이나 출산이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따라서 선택

의 대상으로 하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재생산 노동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하위화되면서, 그 결과는 사회 성원 전체의 앞날에 근본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결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진단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현상은 생애과정 단계에 따라 그 주된 원인이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경로는 ‘결혼율의 감소’로 표현되는 사회환경의 변화이다. 우리 사회는 결혼관계 내에서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율의 감소 혹은 결혼연령의 상승은 곧바로 출산을 하락과 연결된다. 결혼율의 감소는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성평등 의식과 기존의 가족규범 사이에 격차가 커지면서 젊은이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은 더 이상 필수적인 문제도, 매력적인 유인 요소도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율 감소 추세는 장기화된 경제 불황, 이 가운데에서 특히 청년실업의 증대로 인한 결혼 연기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는 여성에게도 결혼 연기를 초래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성에게 ‘일’이 지니는 의미는 배우자의 역할 기대 변화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안으로 변화되었다.

한국사회 저출산을 초래하는 또 다른 원인은, 자녀 출산 이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양성적 지원의 부재 및 그로 인한 개별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기혼여성의 탈진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은 한편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의 필요와 그에 따른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를 독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내 돌봄노동(care work)의 양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돌봄노동의 주체인 여성 취업을 제한하는 모순된 작용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한 사회의 출산력 수준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 현상은 거의 ‘빈 개념’이라고 할 정도로 현 단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 글은 이 가운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저출산 현상의 관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출산 순위는 역시 둘째 자녀 출산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5년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사회 기혼여성 출산 행위의 안정성 정도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출산력 감소 현상의 주요 타겟집단으로 미혼집단이 주목받으면서 2000년 이래 합계출산율 1.8명을 유지하고 있는 유배우여성집단의 출산 행위를 안정되게 바라보는 입장이 정설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 둘째 출산 이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기혼여성의 출산 행태를 규명함으로써 난마와 같이 얽힌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력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40년간 증가해 왔다. OECD와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1960~2000년 사이 미국, 스웨덴, 영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 증가했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Perry-Jenkins, Repetti, and Crouter 2000; Klerman and Leibowitz 1999). 같은 기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 증가했다(BLS 2003).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 이상이 공식노동부문에 종사하였다. 1975년에는 이 비율이 37%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Klerman and Leibowitz 1999).

인구학자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아이를 적게 낳은 여성일수록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이 출산을 줄였다고 결론지었다(Angrist and Evans 1998; Cramer 1980). 그러나 다양한 국가 사례는 출산과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때로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Lloyd 1991; Mason and Palan 1981). 따라서 서구사회 이외의 사회에서 출산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시간활용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DeGraff and Anker 1999; Donahoe 1999; Lloyd 1991; Van Esterik and Greiner 1981).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고 그들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그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간 인과관계의 방향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문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력 수준이 고정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동일한 변수가 상이한 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McDonald(2000)나 Chesnais(1996)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동일한 성 평등 수준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었는지에 따라 다양한 출산력 상태를 보인다는 국제 비교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대한 일반적 가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모든 역사적 시기에 전 사회의 출산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출산조절 기술 등 출산 행위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사회문화적 조건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방향은 동일하지 않다. 또 국가마다, 시기마다 변화 방향과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이재경, 2005).

한국의 경우 1960년 합계출산율은 6.0명(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8%였으나,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아진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48.9%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가정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거나 안정 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1980년에는 여성고용률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았으나, 1999년에는 반대로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는 $R^2=0.46$ 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Sleebos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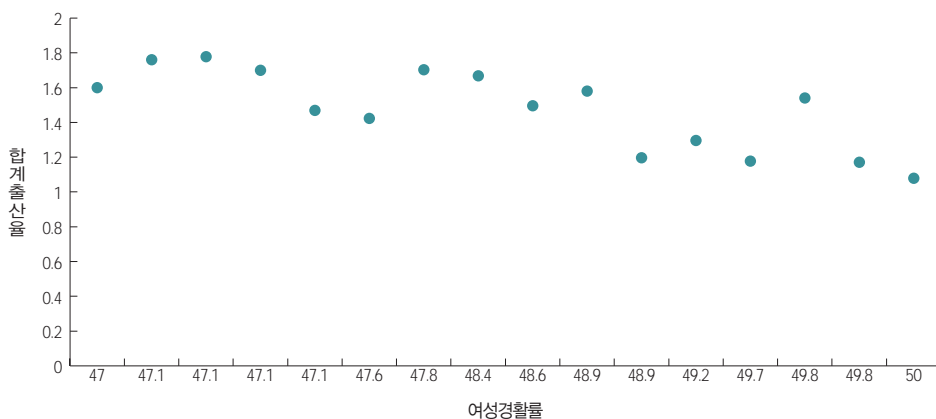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시작점에서 출산은 감소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는 출산 안정 또는 사회가 기대하는 출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는 어떠할까? <그림 1>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도표화한 것이다. 약간의 진동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여성 개인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Sleebos(2003)의 국제비교 결과에서 1980년대 패턴과 유사하다. 한국사회는 OECD 국가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즉 한국사회 여성의 노동참여 증대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단계에서 여성 고용과 출산율이 부(-)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물론 여성 고용률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족의 변화,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도 등 다양한 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 1>에 나타난 여성취업과 출산율의 관계를 인과적 관계로 보는 것도 환원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서 집합수준의 상관성과 개인수준의 인과관계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글의 다음 절에서 개인수준 자료를 통해 여성취업과 출산결정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출산을 미루게 되는 사회경제

<그림 1> 1990~2005년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

단위 : 명, %



※ 자료 :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태통계연보」.

적인 배경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저출산 국가들의 공통된 출산 연기 결정요인은 초기 성숙기의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이 출산 결정과 같은 장기적인 결정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에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이나 다른 형태의 인적자본에 투자하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개인 수준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국가 단위의 거시적 수준에서 출산 연기 및 출산율 저하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발견된다. 최경수(2003)는 2000년대 초반의 우리 사회 출산 감소와 저출산 지속을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로 보고 있다. 소득이나 커리어 전망이 감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 수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Sleeboos 2003). 청년층의 취업률이 높은 북유럽이나 영미계의 출산율은 높은 편이나, 청년층 취업률이 낮은 남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낮다는 사실은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청년층 실업 증가, 직업의 불안정성은 가족 형성 시기를 앞두고 있는 젊은 층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국사회 역시 장기화된 청년 실업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고착됨에 따라, ‘불확실성의 회피’ 가설은 남성청년, 여성청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 연기(birth postponement) 현상 발생에는 공통적인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남유럽 저출산 국가의 경우(이탈리아나 스페인), 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노동 시장 또한 시간제 근무수요나 출산휴가 후의 복직 등과 같은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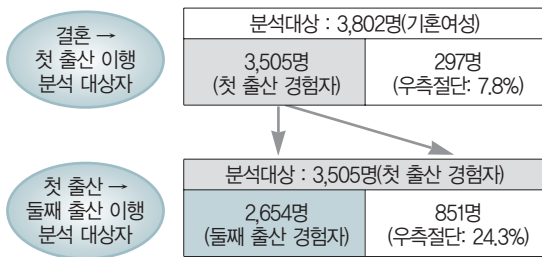
하여,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세금 수당이나 현금 지원 등과 같은 정부의 가족지원제도가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의 공백은 부분적으로 강한 가족적 연대로써 보충되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이나 자녀 보육 등이 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공지원을 가족이 대신하는 것은 현대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충분치 못하며 그 자체가 한계로 작용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한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둘 다 우리 사회보다 높다. 즉 서구 사회에서 자국의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출산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는 동안, 우리 사회 여성은 아직도 일과 자녀양육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참여와 한 사회의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는 결코 일률적이지 않으며, 그 사회의 경제발전 정도, 실업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수준 등 다양한 매개 변수의 영향 하에서 정(+)적인 관계가 될 수도, 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한국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력: 둘째 출산 이행을 중심으로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의 분석 대상과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대상은, 관찰 사건인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에 노출된 사람들, 즉 첫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다. 마찬가지로 첫째 출산으로 이행의 분석대상은 결혼한 여성들이다. 이와 같은 분석 대상의 관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둘째 출산으로 이행의 분석 대상자



조사대상 전체 여성 가운데 결혼에 이른 집단은 3,802명이며, 이 가운데에서 첫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3,505명이다. 즉 전체 여성의 7.8%인 297명이 조사 시점까지 첫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중도절단된 사례이다. 첫 출산을 경험한 3,505명이 이 글의 분석대상으로서 둘째 출산 사건 경험에 노출된 집단이다. 이 가운데 24.3%인 851명이 둘째 출산을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중도절단된 사례가 되고 나머지 2,654명이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였다.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의 종속 변수는 ‘둘째 출산 경험의 해저드율’이다. 종단적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 조건에 부합하는 독립변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 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자료의 제약 때문에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母)의 취업 상황 변수가 구체적인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 등으로 특화되지 못하고 취업유무만으로 구성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의 독립 변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출생 코호트: 5세 간격으로 5개 범주
- ② 교육 수준: 각급 학교별로 중퇴, 졸업 포함하여 4개 범주

- ③ 초혼 연령: 5년 간격으로 5개 범주
- ④ 취업 유무: 관찰기간인 첫 출산-둘째 출산 사이의 취업 유무
- ⑤ 첫째아 성별
- ⑥ 자연유산 경험 유무: 관찰기간인 첫 출산-둘째 출산 사이의 경험 유무
- ⑦ 인공유산 경험 유무: 관찰기간인 첫 출산-둘째 출산 사이의 경험 유무

1) 표본의 특성

둘째 출산으로 이행의 분석 대상 특성은 〈표 1〉과 같다.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 2,654명과 조사 당시 첫째 출산으로 그친 여성 851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대체로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좀 더 나이 든 집단으로 이 특성은 이하 교육수준과 초혼 연령과 연동되어 나타난다. 즉 둘째 출산 경험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여성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며 초혼 연령은 조금 빠른 편이다.

두 집단의 ‘취업유무’ 특성은 매우 대조적이다. 한 자녀만을 둔 여성 가운데 첫 출산 이후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은 전체의 37.5%인 반면,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첫 출산 이후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은 전체의 9.5%에 불과하다.

두 집단의 첫째아 성별에도 차이가 있다. 한 자녀 여성의 자녀가 남아인 경우는 전체의 56.7%인 데 비해, 둘째 출산 경험 여성의 첫 자녀가 남아인 경우는 50.9%이다.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경험 비율은, 둘째 출산 경험 여성이 좀 더 나이 든 집단인 것과 관련되어 이 집단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유산의 경우 2

회 이상 인공유산(중도절단)을 경험한 여성이 한 자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의도적으로 출산을 조정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표 1〉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의 조사대상자 특성

단위 : 명(%)

	한 자녀 여성 (중도절단)	둘째출산 경험여성
출생코호트		
20-24세	33(3.81)	9(0.34)
25-29세	185(21.34)	143(5.42)
30-34세	298(34.37)	659(24.97)
35-39세	186(21.45)	949(35.96)
40-44세	165(19.03)	879(33.31)
교육수준		
중졸(중퇴포함)	51(5.88)	251(9.52)
고졸(중퇴포함)	416(47.98)	1586(60.14)
전문대졸(중퇴포함)	148(17.07)	298(11.30)
4년제대졸(중퇴포함)	252(29.07)	502(19.04)
초혼연도		
2000-2004년	369(42.56)	166(6.29)
1995-1999년	229(26.41)	708(26.83)
1990-1994년	133(15.34)	889(33.69)
1985-1989년	98(11.30)	645(24.44)
1977-1984년	38(4.38)	231(8.75)
취업유무		
없다	542(62.51)	2,389(90.53)
있다	325(37.49)	250(9.47)
첫째아성별		
남성	485(56.73)	1,309(50.97)
여성	370(43.27)	1,259(49.03)
자연유산경험		
없다	791(91.23)	2,372(89.88)
1회	63(7.27)	228(8.64)
2회	10(1.15)	33(1.25)
3회	3(0.35)	1(0.04)
4회	0(0.00)	5(0.19)
인공유산경험		
없다	725(83.62)	2,170(82.23)
1회	114(13.15)	415(15.73)
2회	25(2.88)	40(1.52)
3회	2(0.23)	9(0.34)
4회	1(0.12)	5(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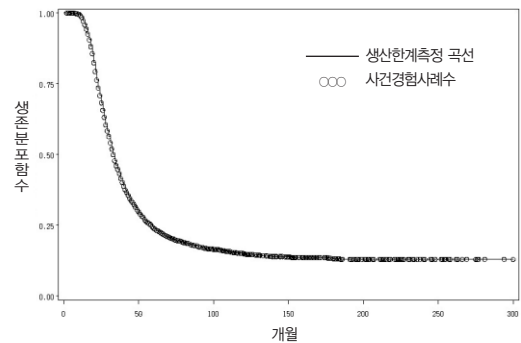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2005),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 분석 결과

〈그림 3〉은 한 자녀를 둔 여성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둘째 출산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의 곡선은 관찰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여성들 즉 첫 출산으로 그친 여성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첫 출산 후 50개월까지 전체 여성의 3/4 가량이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고 나머지 1/4 가량의 여성이 최대 관찰 기간인 300개월까지 둘째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림 3〉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 사건 경험의 생존 곡선



자료 : 상동.

그렇다면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둘째 출산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출생 코호트에 따른 둘째 출산 이행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이미 결혼하고 한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 둘째 자녀를 출산하느냐 출산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당사자 여성들의 연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배우 여성들의 출산력 수준이 1990년대 중반 이래 1.8명 수준에서 안정되었다는 사실(박순일 외, 2004)과도 부합한다.

초혼 연령에 따른 둘째 출산 이행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준거범주인 “1977-1984년 결혼 여성”에 비해 “1985-1989년 결혼 여성”의 둘째 출산 이행률이 90% 유의도 수준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둘째 출산 이행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준거범주인 고졸 여성에 비해 ‘4년제 대학졸업’ 여성의 이행률이 낮았다. 즉 여성들 가운데 고학력자일수록 둘째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는 관찰기간 내 여성의 취업 여부였다. 첫 출산 이후부터 둘째 출산에 이르는 기간(중도절단자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까지) 동안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이 기간 동안 취업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2.3배 정도 더 둘째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였다.

다음으로, ‘결혼 이후 첫 출산까지의 기간’이 둘째 출산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둘째 출산 이행률이 낮아졌다. 첫째 출산을 늦게 한 여성일수록 둘째 출산이 그만큼 늦어지거나 또는 둘째 출산에 대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아의 성별이 둘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이 낮아졌다. 첫째아가 여아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47배 더 둘째 출산을 앞당겼다.

여성들의 자연유산이나 인공유산 경험은 둘 다 해당 여성들의 둘째 출산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 두 변수는 분석모형의 통제변수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둘째 출산 의향의 대리변수로 해석될 수도 있다.

〈표 2〉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에 대한 콕스회귀분석 결과

	계수	표준오차
출생코호트		
20-24세	-0.303	0.349
25-29세	-0.035	0.118
30-34세	0.087	0.078
35-39세	0.052	0.059
40-44세	(준거범주)	
초혼연도		
2000-2004년	-0.147	0.134
1995-1999년	-0.077	0.104
1990-1994년	0.060	0.090
1985-1989년	0.136 #	0.080
1977-1984년	(준거범주)	
교육수준		
중졸(중퇴포함)	0.109	0.072
고졸(중퇴포함)	(준거범주)	
전문대졸(중퇴포함)	-0.099	0.064
4년제대졸(중퇴포함)	-0.233 ***	0.053
취업유무		
없다	(준거범주)	
있다	-1.320 ***	0.069
결혼-첫출산 기간	-0.019 ***	0.002
성별		
남성	-0.165 ***	0.040
여성	(준거범주)	
자연유산경험		
없다	(준거범주)	
있다	-0.468 ***	0.066
인공유산경험		
없다	(준거범주)	
있다	-0.414 ***	0.053
합 계	3,456	
event	2,595	
censored(%)	861(24.91)	
-2 L.L.	3,7586.838 ***	
d.f.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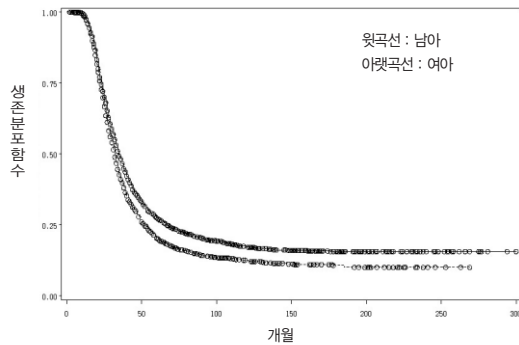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 상동.

〈그림 4〉는 첫째아의 성에 따라 둘째 출산 이행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존곡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그림 3〉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체 관찰 대상이 시간 경과에 따라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면서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대상들, 즉 각 관찰시점에

서 한 자녀만을 둔 여성들의 생존 분포이다. 두 곡선 가운데 위에 있는 곡선은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으로서 밑의 곡선보다 둘째 출산 이행률은 낮고 생존율은 더 높다. 분석 대상 여성의 50%가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은 34개월, 첫째아가 여아인 여성은 31개월 걸린다. 분석 대상 여성의 75%가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은 66개월, 첫째아가 여아인 여성은 51개월 걸린다. 둘째 출산 이행 평균 기간은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은 60.2개월, 첫째아가 여아인 여성은 52.5개월이다.

〈그림 4〉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
첫째아 성에 따른 사건 경험의 생존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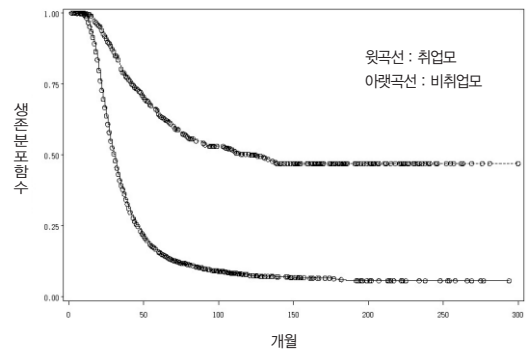


자료: 상동.

〈그림 5〉는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둘째 출산 이행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존곡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곡선 가운데 위에 있는 곡선은 관찰기간 동안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서 밑의 곡선보다 둘째 출산 이행률이 현저히 낮다. 분석 대상 여성의 50%가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은 31개월,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무려 118개월이나 걸린다. 분석 대상 여성의 75%가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

은 46개월이 걸리고,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들 가운데 절반만이 둘째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값을 지니지 않는다. 둘째 출산 이행 평균 기간은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은 45.3개월,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93.8개월이다. 여성들의 관찰기간 내 ‘취업유무’는 둘째 출산 이행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건 경험의 생존 곡선



자료: 상동.

〈표 3〉 변수별 둘째 출산으로 이행 기간 단위: 월

	50% 이행기간	75% 이행기간	둘째 출산 이행 평균 기간
첫째아 성			
남아	34	66	60.2
여아	31	51	52.5
모의 취업유무			
취업경험 있음	118	값 없음	93.8
취업경험 없음	31	46	45.3

자료: 상동.

4. 나오며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글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배우 여성들의 출산력 수준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분석 대상 여성 가운데 둘째 출산까지 경험한 여성들만을 포함하여 평균 출산율을 산출하면, 기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62명이며, 둘째 출산 의향을 지닌 여성들의 계획이 100%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71명이다. 여기에서 실제로 셋째 출산 이상을 경험한 여성들을 포함시킨다면 기혼여성 평균 출산율은 1.8명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유배우 기혼여성의 출산 행위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분석 결과, 관건이 되는 둘째 출산 결정에서 엄마의 취업 여부는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실제로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90.5%가 비취업 상태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 분담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혼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준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으로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통해 자녀출산 및 양육을 마치고서 다시 재취업하는 생애과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역할 규범 및 경력 단절을 받아들이 수 없는 여성들은 결혼으로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한다. 즉 우

리 사회 초저출산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 집단은 결혼관계 내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미혼 집단이며, 결혼관계 내의 출산력 수준은, 성역할 규범과 함께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고한 성역할 규범이 미혼자들의 대안적 생애과정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 자체가 미혼자 집단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관계 내로 진입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일과 가족생활을 관계 맺는 방식은 다변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새롭게 결혼하는 젊은 여성들의 취업애착이 증대하고 그들을 둘러싼 경제적·규범적 환경이 변화될 것을 고려한다면, 기혼여성 출산율의 안정성도 빠른 시일 내에 균열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측면이나 일상생활의 규범적 측면에서 일대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박수미 외, 2005).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때, 우리 사회가 일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노동권과 부모권은 화해될 수도, 대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수미 · 정진주 · 박선영. 2005.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박순일 · 이삼식 · 변용찬 · 김승권 · 최은영. 2004. “저출산 현황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king paper 2004-03.
- 이재경 · 조영미 · 이은아 · 유정미. 2005. 『저출산의 젠더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최경수. 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망과 분석』.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개발원.
- Angrist, J. & W. N. Evans. 1998. “Children and their parents labor supply: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family size.” *American Economic Review* 88: 450~77.
- Brewster, K. L. & R.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96.
- Chesnais, J.-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729~39.
- Cramer, J. C. 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causal di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78~90.
- DeGraff, D. S. & R. Anker. 1999. *Gender, labour markets, and women’s work*. Lièg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 Donahoe, D. A. 1999. “Measuring women’s work in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5: 543~74.
- Klerman, J. A. & A. Leibowitz. 1999. “Job continuity among new mothers.” *Demography* 36: 377~85.
- Lloyd, C. B. 1991. “The contribution of the world fertility surveys to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ork and fertility.” *Studies in Family Planning* 22(May/June): 144~61.
- Mason, K. O. & V. T. Palan. 1981. “Female employment and fertility in Peninsular Malaysia: the maternal role incompatibility hypothesis reconsidered.” *Demography* 37: 523~33.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30.
- Perry-Jenkins, Maureen, Rena L. Repetti, & Ann C. Crouter. 2000. “Work and family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81~98.
- Rindfuss, R. R. & K. L. Brewster. 1996.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Suppl.): 258~89.
- Sleebos, J. 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 Van Esterik, P. & T. Greiner. 1981. “Breastfeeding and women’s work: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4): 184~97.